

해상운송 대신 위험 수십배 높은 육상운송이라니

한빛원전 방사성 폐기물 육상운송 추진

어민들 반발에 선박접안 위한 준설도 못해 가동중단 우려 속 바닷길 막히자 급선회 공론화 절차 전혀 없어 원전 폐쇄성 비판도

한빛(영광)원전의 지역 어민들 설득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데 따라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핵심 시설인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빛원전은 이달 계획했던 방사성 폐기물의 첫 해상운송 작업이 실패하자 급기야 해상 운송 대신, 방사성 폐기물의 '육상 운반'이라는 조유의 방안까지 꺼내놓았다.

육상 운반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노출 우려, 보안 등을 제외하고라도 연안 해운에 비해 무려 71배나 인명피해의 상대적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되는 실정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원자력안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빛원전과 원자력환경공단 등은 6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해상 운송 과정에서 지역 어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육상 운송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 운송 사실상 불가능. 왜? 한빛원전은 발전소 가동 중단 사태가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위기감에서 원자력환경공단에 육상 운송 계획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해상 운송을 위해 필수적인 주민 설득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다.

당장 영광지역 어민 700여명은 방사성 폐기물을 2600t급 선박을 통해 연간 3차례 1000드럼(1드럼 200ℓ)씩 바닷길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조업 손실·수산물 안전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당 지역 어민들은 또 자칫 생존권 위협 및 안전성 논란에 따른 피해에 상응하는 손실보상금(어선 1척당 2000만원 수준)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지역 어민들 상당수는 운배수 배출로 인한 어민 피해 보상금 소송과 연계하는 방안도 꺼

내들면서 사실상 해상 운송은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한수원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해상 운송을 위한 준설 작업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2600t급 선박 접안을 위한 준설 작업이 필수적이지만 이마저도 영광군이 어민 동의를 전제로 내세운다. 준설 기간을 포함하면 수개월이 걸려 원전 가동 중단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육상 운송. 정말 가능한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뢰를 받은 원자력환경공단은 이미 구체적인 육상 운송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컨대, 원자력환경공단은 해상 운송 대신 도로로 차량을 이용해 방사성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 4대에 1대당 16드럼씩 실어 20일간 운반한다는 내부 계획까지 세워놓았다. 육상 이송 경로 중 전남·경북 등의 교량 수, 하중, 교통량, 인

구 밀집 현황 파악도 진행중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방사성 물질에 대한 노출 우려가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데도,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원전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해상·육상 운송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아 원전 당국 스스로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조유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의뢰를 받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육상으로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면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어민들을 설득, 해상 운송에 나서는 것도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공무원 연금 개혁 호남권 포럼 무산 공무원노조 저지로

안전행정부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마련한 '호남권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포럼'이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국민포럼이 무산된 것은 지난 4일 제1명 남권(부산)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전남지역 9개 공공기관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직연금 강화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투쟁본부(이하 대책위)' 150명은 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철회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민포럼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행사장인 시청 3층 중회의실을 점거한 뒤 "대국민 사기극 국민포럼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무원 연금개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국민포럼 개시시간이 되면서 안전행정부 직원들은 행사장을 찾았으나 대책위의 저지로 10분 만에 행사장을 서둘러 빠져 나갔다.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과 패널들은 아예 입장조차 하지 못했으며 일부 안행부 직원들은 대책위 측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기도 했다.

이날 국민포럼은 열리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 경력 1개 중대(90명)를 행사장 주변에 배치했으나 우려했던 마찰은 벌어지지 않았다.

안행부는 오는 11일 대구에서 제2명 남권(대구·울산·경북)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하고 들러리 세우는 방식의 거짓과 위선의 대국민 사기극인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국민포럼'을 당장 중단하라"면서 "여당은 당사자와 논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혁하려고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백희준기자 bhj@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5년 구형

"아이들 몇 명이 죽었는데..." 피해 가족들 불만

"너무하잖아요. 아이들 몇 명이 죽었는데..."

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김한식(71)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화물하역업체와 인천항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은 현실과 국민의 법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를 인식한 듯 구형(求刑)에 앞서 범의 한도를 언급하며 "엄정한 처벌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도 했지만 피해 가족들은 구형량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향후 예정된 범원의 최종 판단이 국민의 분노를 달래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익)는 이날 재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업무상과

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지휘체계의 정점에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청해진해운 안모(60) 해무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고 김모(63) 청해진해운 상무에 금고 5년, 벌금 200만원을, 남모(56) 청해진해운 물류팀장과 김모(45) 물류팀 차장에게는 금고 4년 6월에 벌금 200만원, 박모(46) 청해진해운 해무팀장은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신모(47)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에게는 금고 4년 6월, W화물하역업체 문모(58) 본부장과 이모(50) 팀장에게 금고 4년, 해운조합 전모(31) 운항관리자에게

징역 5년, 김모(51) 운항관리실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수십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안 이사는 선박 중·개조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고철을 빼돌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배임)가 추가돼 징역형 수위가 높아졌다.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거나 과실 이상의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1시에 열린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6일 오전 광주 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가 들어서고 있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과 함께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진도체육관 실종자 가족 일부 "거처 옮기겠다"

전남대자연학습장으로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를 기다리던 가족들 일부가 205일 만에 임시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6일 실종자 가족들과 진도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부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이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거처를 전남대학교 자연학습장으로 옮기겠다는 의사

를 군청 세월호사고수습지원과에 전달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참사 초기 생존자들이 가장 먼저 이송된 진도체육관이 가지는 의미가 크지만 지역민의 요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가족은 체육관 잔류와 팽목항 이전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교육부와 전남대 측에 자연학습장 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이전 준비를 논의했다. 이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실종자 가족들과 진도법민대책위원회,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 3자 협의를 진행했다.

전남대학교 자연학습장은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팽목항과 비교적 가까이에 있지만 대중교통 이동이 어려운 외딴곳에 있어 자원봉사자나 지원 단체, 공무원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중국산 수의, 국산 속여 고가 판매

○농촌에 사는 노인들에게 중국산 수의를 국산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한 2인조 사기단이 경찰서행.

○6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임모(60)씨 등 2명은 지난 2월 23일 밤 8시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마을회관에서 최모(여·80)씨 등에게 중국산 수의(시가 30만 원)를 국내산 수의(시가 130만 원)로 속여 팔아 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

○이들은 저가의 흉터 등 건강식품을 간 기능에 좋은 치료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임씨는 경찰에서 "계란 한 판을 1000원에 사면 화장지·세제는 공짜로 나눠준다"는 말로 노인들을 꼬였다"고 진술.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 분양/임대

규모: 지하1층, 지상8층
준공예정: 2015년 5월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탁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개발유) · 시공사 |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준공예정: 2015년 2월

- 유용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입주자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립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규모: 지하1층, 지상6층
준공예정: 2015년 3월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유)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